

---

#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

---

2022. 9. 13.

관 계 부 처 합 동

## 순 서

I . 추진 배경 .....	1
1. 예타제도 현황 .....	1
2. 그간의 성과 및 제도개편 필요성 .....	2
II . 예타제도 개편방향 .....	3
III . 예타제도 세부개편방안 .....	6
1. 엄격한 예타제도 운영·관리 .....	6
2. 예타의 신속성·유연성·투명성 제고 .....	10
3. 예타 평가 내실화 .....	13
IV . 향후 추진계획 .....	16

# I. 추진 배경

## 1 예타제도 현황

### □ '99년부터 대규모 신규 재정사업에 대한 예타제도 운영중

- (대상요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 국비 300억원 이상인  
건설(SOC·건축)·정보화·R&D 분야 신규사업
  - \* 복지·교육·환경 등 기타재정사업 : 중기재정지출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
  - ※ R&D사업 예타는 '18.4월부터 과기부에 위탁 수행
- (면제요건) 공공청사, 문화재 복원, 국방, 재난예방, 남북협력,  
법령상 의무사업, 국가정책적 추진사업 등(국가재정법 제38조②)
- (평가항목) ①경제성(B/C), ②정책성, ③지역균형발전 항목 평가  
→ 종합평가 결과 AHP가 0.5 이상인 경우 타당성 확보
  - \* 초기에는 경제성만 평가(~'02) + 정책성 평가('03~) + 지역균형발전 평가('06~)

< 예타 평가항목별 가중치 변화(건설분야, %) >

구 분	'99~	'03~	'06~	'09~	'12~	'16~	'17.9~	'19.5~	
								수도권	비수도권
경제성	100	50	40~50	좌동	좌동	좌동	35~50	60~70	30~45
정책성	-	50	25~35	좌동	좌동	좌동	25~40	30~40	25~40
지역균형발전	-	-	15~25	15~30	20~30	25~30	25~35	-	30~40

< 사업유형별 평가항목 및 가중치('19.5~, %) >

구 분	SOC·건축		정보화		기타재정		복지·소득이전	
	수도권	비수도권	B/C	E/C	B/C	E/C	항목	배점
경제성	60~70	30~45	40~50	30~40	25~50	20~40	경제사회환경	100점
정책성	30~40	25~40	20~30	20~30	50~75	60~80	사업설계 적정성	100점
지역균형발전 (정보화는 기술성)	-	30~40	30~40	40~50	-	-	비용-효과성	100점

- (조사절차) 대상선정(재정사업평가위원회) → 경제성(B/C) 분석(KDI·조세연) → 종합평가(분과위원회) → 심의·의결(재정사업평가위원회)

## 2 그간의 성과 및 제도개편 필요성

### □ 객관적·중립적 타당성 검증을 통해 재정운영 효율화에 기여

- 대규모 신규 재정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타당성 검증을 통해 타당성이 낮은 불요불급 사업 방지 및 재정운영 효율성 제고
    - '99년 예타제도 도입 후 23년간('99~'22.8) 총 975개 사업(477.3조원) 예타 실시 → 타당성 미흡한 350개 사업(184.1조원, 35.9%) 사전차단
  - '19.4월 예타제도 개편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평가 강화
    - 수도권·비수도권을 이원화하여 비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 평가를 강화\*(+5%p)하고, 수도권은 경제성·정책성\*\*을 중심으로 평가
- \* (비수도권)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 (당초) 25~35% → (변경) 30~40%
- \*\* (수도권) 경제성 가중치 : 60~70%, 정책성 가중치 : 30~40%

### □ 최근 경제·사회환경 변화 등에 따른 예타 제도개편 요구 증가

- ① 지난 5년간 예타면제 증가 등에 따라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타 본래의 목적이 약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 증가
- ② 예타가 부처의 자율적 사업추진과 조사참여를 제한하고 조사지연으로 시급한 사업추진이 저해되는 등 경직적이라는 문제제기
  - 사업별 예타 진행상황 등에 대한 대외 정보 공개도 부족
- ③ 경제·사회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편익 및 사업별 특수성 반영 미흡 등 예타 평가가 획일적이라는 지적

## II. 예타제도 개편방향

- ◇ 엄격한 예타제도 운영을 통해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재정의 문지기(Gate-Keeper)'로서 예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
- ◇ 경제·사회환경 변화에 맞게 예타제도를 신속·유연·투명하게 운영하면서 평가기준·방법 내실화 등을 통해 평가의 정확성 및 평가과정·결과에 대한 사업부처의 자율성·수용성 제고

### 1. 엄격한 예타제도 운영·관리

- ❶ (예타면제) 예타 면제요건 구체화 및 엄격한 적용
- ❷ (면제이후 관리) 면제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확대
- ❸ (복지사업) 대규모 복지사업 평가·검증기준 강화

### 2. 예타의 신속성·유연성·투명성 제고

- ❶ (신속성) 신속예타절차 도입을 통해 긴급한 정책수요 적기 대응
- ❷ (자율성) SOC·R&D사업 예타 대상사업 기준금액 상향조정
- ❸ (참여) 예타시 부처가 참여하는 상시협의·조정협의체 구성·운영
- ❹ (투명성) 사업·지역별 예타 진행현황 등을 지도 형태로 대외공개

### 3. 예타 평가 내실화

- ❶ (경제성 분석) 안전·환경, 삶의질 등 다양한 편익 발굴·확대
- ❷ (정책성 분석) 사업특성 반영한 부처 제시 사업특화항목 신설
- ❸ (지역균형발전 분석) 지역낙후도 개선효과 평가항목 신설
- ❹ (종합평가) 평가위원 구성 개선 및 ICT 기반 종합평가 도입

## 〈 예타제도 개편방향 〉

### 목표

**경제·사회여건 변화에 맞는 선진 예타 제도 운용**

### 개편방향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문지기(Gate-Keeper) 역할 수행

+

경제·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한 예타의 신속성·유연성·투명성 제고

### 3대 부문 7대 개편과제

#### 엄격한 예타제도 운영

##### ① 예타면제 관리 강화

- ❶ 면제요건 구체화 및 엄격한 적용
- ❷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확대 실시
- ❸ 면제사업에 대한 국회 심사 강화

##### ② 복지사업 평가·검증기준 강화

- ❶ 시범사업 실시 확대
- ❷ 평가결과 산출기준 강화
- ❸ 평가항목별 가중치 조정
- ❹ 복지사업 사후·검증평가 강화

#### 예타의 신속성·유연성·투명성 제고

##### ① 신속한 예타 수행

- ❶ 신속예타절차 도입
- ❷ 일반예타절차 기간 단축

##### ② 부처 자율성 및 참여 확대

- ❶ 예타 대상사업 기준금액 상향조정
- ❷ 부처 참여 상시 협의·조정체계 구축
- ❸ 지도 기반 예타 정보서비스 제공

#### 예타 평가 내실화

##### ① 다양한 편익 발굴·확대

- ❶ 비용-편익분석(B/C) 편익항목 확대

##### ③ 종합평가(AHP) 운용기반 강화

- ❶ 종합평가 수행체계·방식 개선
- ❷ ICT 기반 종합평가 도입

##### ② 사업별 특수성 반영

- ❶ 부처 제시 사업특화항목 신설 등 정책성 분석 개선
- ❷ 지역낙후도 개선효과 평가 신설 등 지역균형발전 분석 개선

## 예타제도 개편 6대 핵심과제

- ① 불명확한 예타 **면제조건**을 **구체화**하고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하여 **예타면제 최소화**

\* ('08~'12) 90개 사업 / 61.1조원 → ('13~'17.5) 94개 사업 / 25.0조원  
→ ('17.6~'22.4) 149개 사업 / 120.1조원

- ②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신속예타절차** 도입을 통해 당초 대비 예타 대상선정+조사기간을 총 **4개월\*** 단축

\* 예타 대상사업 선정기간 : 1개월 단축 (당초 2개월 → 단축 1개월),  
예타 조사기간 : 3개월 단축 (당초 9개월 → 단축 6개월)

- ③ 국민이 관심 있는 지역·사업의 예타 **진행상황\***, 사업내용 등의 정보를 **지역별**로 쉽게 알 수 있도록 **지도** 형태로 제공

\* (예타 진행상황) 예타착수 → 1차 점검회의 → 2차 점검회의 → 종합평가 (AHP) →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상정 → 조사 완료

- ④ **SOC·R&D** 사업의 예타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1,000억원** (국비 300→500억원)으로 **상향조정**

- ⑤ 대규모 **복지사업**은 **시범사업** 실시 후 시범사업 **평가결과**를 토대로 본사업 예타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 신설

\* 현재까지 예타 실시한 12개 복지사업 중 9개 사업이 시범사업 없이 예타 신청

- ⑥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의료시설** 분야 **편의\***을 대폭 추가 발굴하여 경제성(B/C) 분석에 적극 반영

\* 예 : 대규모 감염병 관리효과(예방·확산방지), 초기 집중재활치료를 통한 재원일수 감소효과, 지역사회 보건사업 추진효과 등

### Ⅲ. 예타제도 세부개편방안

#### 1. 엄격한 예타제도 운영·관리

1

#### 예타면제 관리 강화

##### ① 예타 면제요건 구체화 및 엄격한 적용

- (현황) 최근 예타면제 규모\*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면제요건이 불명확하고 엄격하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 ('08~'12) 90건(61.1조) → ('13~'17.5) 94건(25조) → ('17.5~'22.4) 149건(120.1조원)

- (개선) 불명확한 예타 면제요건을 구체화하고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하여 예타면제 최소화

< 예타 면제요건 구체화(안) >

현행 면제요건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면제요건 구체화 (예타운용지침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재 복원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원 외 관련 도로정비 등 주변정비사업이 전체의 50% 이상인 경우 면제대상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안보와 관계되거나 보안이 필요한 국방 관련 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과 경합하거나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 사용료가 부과되는 사업 등 비전력 부문 사업은 면제대상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교류협력 또는 국가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교류협력)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업에 한해 면제</li> <li>· (협약·조약)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와 맺은 협약·조약 중 대통령 재가 또는 국회 동의를 받은 사업에 한해 면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복구 지원, 시설안전성 확보, 보건·식품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안전성)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등을 통해 안전문제가 확인되어 조치가 필요한 시설물 또는 시설물 운영에 한해 면제</li> <li>· (식품안전) 식품안전기본법상 긴급대응 방안에 포함된 사업에 한해 면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 추진이 필요한 사업(본문) + 국무회의 의결 및 사업계획 구체성(세부요건)</li> </ul>	<p>&lt;본문 : 현행 유지, 세부요건 : 구체화&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체성) 사업규모·사업비 등의 세부산출 근거가 있고, 자원조달·운영계획, 정책효과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사업</li> </ul>



## ② 예타면제 이후 관리 강화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확대 실시

- (현황) '국가정책적 필요'에 따라 예타면제된 사업(10호)에 한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실시 의무화
  - 기타 사유로 면제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실시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 미비
- (개선) 예타면제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확대 실시를 통해 면제 이후 사업관리 강화
  - ❶ 공공청사\*(1호) 및 ❷ 법령상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8호)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전면 실시
    - ❶ 사업규모 과다 산정 유인이 큰 사업(예 : 호화청사)
    - ❷ 구체적인 내용상 면제사유 없이 법령 규정만을 토대로 면제된 사업

## ③ 예타면제 사업에 대한 국회 심사 강화

- (현황) 예타면제 사업 관련 정보에 대한 대외 공개 미흡
  - 국회에 예산안 첨부서류 제출시 예타면제 사업의 내역 및 면제사유를 제출하고 있으나 지나치게 개괄적이라는 지적
- (개선) 예타면제 사업 관련 국회 제출자료 구체화를 통해 면제사업에 대한 국회 심사 강화
  - (기존) 면제사업의 소관부처, 사업명, 면제근거(사유)만 제출 → (개선)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필요성·기대효과 등 추가제출

## ① 대규모 복지사업에 대한 시범사업 실시 확대

- (현황) 상당수 대규모 복지사업이 시범사업 없이 본사업 추진
  - \* 현재까지 예타 실시한 12개 복지사업 중 9개 사업이 시범사업 없이 예타 신청
  - 복지사업은 일단 재정이 투입되면 사업 중단이 어려운 비가역적 특성이 있어 신규사업 추진 여부 판단시 신중 검토 필요
- (개선) 예타 대상사업 선정 단계에서 시범사업 실시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 신설
  - ① 예타 신청된 복지사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필요성 검토
  - ② 시범사업 필요 사업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시범사업 실시
  - ③ 시범사업 시행 성과 평가 후 평가결과를 토대로 본사업에 대한 예타 착수 여부 검토

## ② 복지사업 예타 평가결과 산출기준 강화

- (현황) 평가결과에 따라 ①원안 추진, ②전면 재기획, ③조건부 추진 중 결정 → 대부분의 복지사업이 조건부 추진\*에 편중
  - \* 조건부 추진 : 사업계획 보완을 조건으로 예타 통과 결정
  - 예타제도 개편('19.4) 이후 실시한 복지사업 예타 7건 모두 '조건부 추진' 결정
- (개선) '조건부 추진' 편중 문제 완화 및 엄격한 평가를 위해 '조건부 추진'의 점수구간 축소 및 '전면 재기획' 점수구간 확대

	현행	조정(안)
원안 추진	3개 영역* 모두 85점 이상	3개 영역 모두 85점 이상
전면 재기획	2개 영역 이상이 70점 미만	2개 영역 이상이 75점 미만
조건부 추진	그 외 경우	그 외 경우

\* ①경제·사회 환경분석, ②사업설계의 적정성, ③비용-효과성 분석

### ③ 복지사업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항목별 가중치 조정

- (현황) 복지·소득이전사업의 특성, 평가항목별 상대적 중요성·차이점 등에 관계없이 3개 항목\*에 대해 동일 가중치 부여

\* ①경제·사회환경분석(100점), ②사업설계의 적정성(100점), ③비용-효과성(100점)

- (개선) 평가항목별 상대적 중요성 등을 반영하여 가중치 조정
  - 복지사업은 사업 착수 前 사업설계가 중요 → 비가역성 등 복지사업의 특성을 감안, '사업설계의 적정성' 항목 가중치 확대

< 복지·소득이전사업 평가항목별 가중치 조정(안) >

평가항목	현행 가중치(배점)	변경
경제·사회환경 분석	100점	90점
<b>사업설계의 적정성</b>	100점	<b>120점</b>
비용-효과성	100점	90점

### ④ 복지사업에 대한 예타 이후 사후검증·평가 강화

- (현황) '조건부 추진'으로 결정된 복지사업에 대한 사후검증·평가 절차·제도 미비
- (개선) '조건부 추진'으로 결정된 복지사업은 사업시행 2~3년 후 심층평가 대상에 포함하여 사후평가 및 개선사항 환류
  - 예타 결과 확정시 심층평가 필요성, 평가시기, 평가를 위한 관련 자료 축적 등에 관한 사항 제시

## 2. 예타의 신속성·유연성·투명성 제고

1

### 사업 적기 추진을 위한 신속 예타 수행

#### ① 신속 예타절차 도입을 통해 긴급한 정책수요에 적기 대응

- (현황) 예타수행에 평균 1년 이상 소요되어 긴급한 경제·사회 상황 대응 등을 위한 시급한 사업 추진을 저해한다는 지적

\* 평균 예타 조사기간(실적 기준) : ('19) 20.1, ('20) 14.9, ('21) 17.2개월

- (개선)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신속예타절차** 도입을 통해 당초 대비 예타 대상선정+조사기간을 총 **4개월\*** 단축

\* (신속예타요건) ①타법률에 예타신속처리 규정이 있는 사업, 안전관리 및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신속한 조사가 필요한 사업으로 ②구체적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③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업

- 예타운용지침상 예타 대상사업 선정기간 1개월 단축(2→1개월)  
+ 조사기간 3개월 단축(9→6개월, 철도 : 12→9개월)

#### ② 일반 예타절차 기간 단축

- 신속 예타절차 적용 대상사업이 아닌 일반사업에 대해서도 예타가 지연되지 않도록 예타 조사기간을 엄격히 준수
- 예타 총 조사기간이 최대 1년 6개월(철도 2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

## ① 예타 대상사업 기준 상향조정

- (현황) 경제·재정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99년에 도입한 예타 대상 기준(총사업비 500억원 & 국비 300억원)을 23년째 유지

\* GDP(명목) : ('99) 591 → ('21) 2,072조원 ('99년 대비 3.5배)  
총지출(본예산 기준) : ('99) 145 → ('21) 558조원 ('99년 대비 3.8배)

- (개선) SOC·R&D 사업의 예타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1,000억원(국비 300→500억원)으로 상향조정

- 500~1,000억원 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 지침을 준용하여 사업부처가 사전타당성조사 등 자체 타당성 검증 실시

※ 현재 관련 국가재정법 개정안(김태흠·홍성국 의원 등 8건) 국회 기재위 계류중

## ② 부처 등이 참여하는 상시 협의·조정체계 구축

- (현황) 예타조사시 중립성·전문성 강조, 공급자(기재부·조사수행기관)·결과도출 위주의 운영으로 부처·지자체 역할·참여는 제한적

- (개선) 주무부처·조사수행기관·기재부가 예타조사 단계별로 상시 협의·조정하는 실무조정협의체 구성·운영

- 분석기준의 해석·적용, 비용·편익 관련 쟁점·이견 등 논의

### ③ 에타조사 진행현황 등 지도 기반 에타정보서비스 제공

- (현황) 사업별 에타결과 보고서 및 수요예측 기초자료만 대외적으로 공개중
- (개선) 국민이 관심 있는 지역·사업의 에타 진행상황, 사업내용 등에 대한 정보를 지역별로 쉽게 알 수 있도록 지도\* 형태로 제공

\* 지도에서 관심 있는 지역을 클릭하면 해당 지역 관련 에타 진행 사업의 사업내용 및 에타조사 단계별 진행상황 등에 대한 정보 표시

⇒ 에타 대상사업 정보를 지역별로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에타 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

#### < 지도(map) 기반 에타정보서비스 제공체계 >

##### 【 사업별 에타 진행상황 】

- ①에타착수 → ②1차 점검회의 → ③2차 점검회의 → ④종합평가(AHP) → ⑤재정사업평가위원회 → ⑥조사완료

##### 【 사업내용 】

- 사업목적, 사업규모, 사업위치, 총사업비, 사업기간, 추진경과 등

##### ▶ A 건설사업

- 1차 점검회의 완료('22.4.2)
- 총사업비 : 3,000억원,  
사업기간 : '21~'25년 .....



### 3. 에타 평가 내실화

1

#### 다양한 편익 발굴·확대

#### □ 다양한 편익이 반영되도록 경제성 분석 개선

- (현황) 방법론상의 한계로 안전·환경, 삶의 질 등 다양한 편익이 경제성(B/C) 분석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개선) 방법론 개발 등을 통해 화폐가치화가 가능해진 다양한 편익을 경제성 분석 편익 항목에 추가 반영
  - 특히,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대규모 감염병 관리효과 등 의료시설 분야의 편익 대폭 발굴·보강

⇒ 향후 지속적으로 분야별 편익 추가 발굴·확대 추진

< 추가 발굴 편익(안) >

분야	현행 편익	추가 발굴 편익
도로 · 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량운행비용·통행시간 절감편익</li> <li>▪ 교통사고 감소편익</li> <li>▪ 환경비용(공해·소음) 절감편익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행 쾌적성 향상 편익</li> <li>▪ 통행시간 정시성 편익</li> <li>▪ 수질오염개선 편익</li> </ul>
항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박대기비용 절감편익</li> <li>▪ 내륙운송비용 절감편익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항건설 편익</li> <li>▪ 항만배후단지 편익</li> </ul>
의료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거리 의료시설 이용시간 및 이용교통비 절감편익</li> <li>▪ 응급사망 감소편익</li> <li>▪ 대기시간 단축편익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규모 감염병 관리효과(예방·확산방지)</li> <li>▪ 초기 집중재활치료를 통한 재원일수 감소효과</li> <li>▪ 지역사회 보건사업 추진효과</li> <li>▪ 특수질환군 전문치료센터 운영에 따른 환자의 사회복귀 개선효과</li> <li>▪ 의료인력 대상 첨단시뮬레이션 중심 맞춤형 교육효과(의료사고 감소효과)</li> </ul>

### ① 사업별 고유 정책목적·특수성이 반영되도록 정책성 분석 개선

- (현황) 사전에 정해진 4개 평가항목\*에 대해서만 획일적으로 정책효과 분석 → 다양한 사업별 고유 정책효과 분석 곤란
  - \* 일자리효과, 생활여건 영향, 환경성, 안전성 등 교통·SOC에 적합한 항목 위주
- (개선) 사업별 정책목적·특성에 맞게 부처가 제시하는 사업 특화 항목\*을 조사수행기관·기재부 협의를 거쳐 선정·평가
  - \* 경제성 분석 편익 및 타 정책성 분석내용과 중복되지 않도록 항목 선정

### ② 사업별·지역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지역균형발전 분석 개선

- (현황) 사업별·지역별 특성에 관계 없이 모든 사업·지역에 대해 지역낙후도지수\* 및 순위를 산정하여 정량평가 실시
  - \*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발표한 균형발전지표('20년, 43개) 중 36개 지표(인구, 주거, 교육, 안전, 환경, 보건복지 등)를 활용하여 지역낙후도 지수 및 순위 산정
- 해당지역의 지역낙후도 수준(순위)만 평가에 반영되고, 해당 사업이 해당지역 낙후도 개선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미반영
- (개선) 단순한 지역낙후도 수준 평가에서 벗어나 사업별·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의 실질적인 지역낙후도 개선효과 평가
  - ① 균형발전지표(36개) 중 해당 사업·지역에 관련된 지표들을 부처가 자율적으로 선정
  - ② 부처가 사업시행에 따른 지역낙후도 개선효과를 제시하면 조사수행기관 검토 후 분과위에서 종합평가



## ① 종합평가(AHP) 수행체계·방식 개선

- (현황)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 종합평가(AHP) 수행시 평가의 객관성·중립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재정사업평가위원회 민간위원 2명, 분과위원 5명, 연구진 3명으로 구성

- 또한, 현재 종합평가지 평가위원들에게 해당사업의 B/C값 미공개 → 해당사업에 대한 종합적·균형적인 평가 저해

- (개선) 평가의 객관성·중립성 제고를 위해 분과위원 구성 개선 및 평가정보 제공 확대

① 분과위원 수를 확대(10→12명)하고, 평가지 최고·최저 점수를 2개씩 제외(현재는 1개씩 제외) 후 산술평균

② 평가위원들에게 B/C값 범주\*에 대한 정보 제공

\* 예 : A ( $B/C > 0.8$ ), B ( $B/C < 0.8$ )

## ② ICT 기반 종합평가 도입

- (현황) 신속한 평가결과 도출, 체계적인 평가자료 관리 등을 위한 종합평가 체계화·효율화 필요

- (개선) ICT 기반 종합평가를 도입하여 평가 정확도·효율성 제고

- 예타 종합평가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해 종합평가를 자동화 하고, 실시간 결과 분석 및 즉각적인 피드백 지원

## IV. 향후 추진계획

◇ 관련 법령·지침 개정 등 「예타제도 개편방안」 후속조치 추진

- ☐ 제도 개편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9~12월)
- ☐ 제도 개편 주요내용 부처·지자체 설명회 개최(10월)
- ☐ 분야별 편익 발굴·구체화 등을 위한 추가 연구용역 실시(~12월)

◇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
2. 문화재 복원사업
3. 국가안보에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국방 관련 사업
4.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5.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 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7.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8.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9. 출연·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10.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나. 국가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제10호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자원조달 방안,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한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